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6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용갑 · 한병도
박희승 · 박민규 · 문대림
조계원 · 박홍배 · 정동영
김교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·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,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.

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에서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, 자연 ·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,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,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전시 ·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·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의 제목 중 “예보”를 “및 국가비상사태 예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람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 사고 및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사람의”로, “및 재산에”를 “· 재산 및 안전에”로, “그”를 “이를 알리거나 그”로, “예방하거나”를 “예방 또는”으로, “재난”을 “재난 및 국가비상사태(이하 “재난 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난에”를 “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”로, “재난과”를 “재난 등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재난에”를 “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”로, “필요하면”을 “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”로, “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요청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재난에”를 “재난 등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재난의”를 “재난 등의”로 한다.

1.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

2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

3.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의2(재난 <u>예보</u> · 경보체계 구축 · 운영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<u>사람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</u>	제38조의2(재난 <u>및 국가비상사태 예보</u> · 경보체계 구축 · 운영 등) ①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 사고 및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사람의-----</u> ----- <u>· 재산 및 안전에-----</u> <u>-이를 알리거나 그-----예방 또는-----재난 및 국가비상사태(이하 “재난 등”이라 한다)-----</u> 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 1. <u>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</u> 2. <u>전시 ·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</u> 3. <u>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</u>
<신 설>	
<신 설>	
<신 설>	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5.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한다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⑤ (생략)

② -----
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-----
-----재난 등과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-----

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-----
요청하여야 한다.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재난 등에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<p>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,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<u>재난의</u> 예보·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⑦ ~ ⑫ (생략)</p>	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<u>재난 등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